

# 취재요청서

배포일: 2017. 4. 11. (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신	청년유니온 (02-735-0261 / fax 0303-3447-0261) 민달팽이유니온 (070-4145-912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 시민들은 대선날짜를 바꾸었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2017. 4. 12.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북단

연락처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010-9930-4650)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010-3042-7565)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010-7277-8321)
-----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청년단체,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 단체 및 개인)은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북단 앞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선거를 선거답게 만들기 위한 요구와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합니다.
3.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

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4.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 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5.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6.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합니다.

##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 “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2017년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북단

-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
- 기자회견 취지 및 순서 안내
- 촛불대선 의미 상실시키는 선거운동 비판과 선거다운 선거 위한 3가지 약속 제안
- 2017 청년유권자행동 활동계획 발표
- 2017 대선 청년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 요구안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붙임자료

#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 I. 고용

### 1. 구직활동지원 - 청년수당 전국화

#### □ 정책목표

-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 청년 구직자에 대한

#### □ 정책내용

-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 2. 고용보험 개혁

#### □ 정책목표

-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 □ 정책내용

-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 정책목표

-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 □ 정책내용

-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 II. 주거

## 1. 계약갱신청구권

### □ 정책목표

-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 □ 정책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2. 주거바우처(디딤돌 / 민달팽이)

### □ 정책목표

-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 □ 정책내용

-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 III. 부채

※ 추후제출

## IV. 노동

###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 □ 정책목표

-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 □ 정책내용

-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 2. 최저임금 1만원

### □ 정책목표

-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 정책내용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 □ 정책목표

-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 □ 정책내용

-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 V. 교육

###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 □ 정책목표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 □ 정책내용

-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책임 강화
-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VI. 정치

###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 정책목표

-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 □ 정책내용

-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 포함
-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 □ 정책목표

-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 □ 정책내용

-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